

지역차별의 경제학

박 기 성*

< 목 次 >

- | | |
|----------------------|------------|
| I. 머리말 | V. 통계적 증거 |
| II. 지역차별의 定義 | VI. 정책적 함의 |
| III. 지역차별의 效果 | |
| IV. 시장차별계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 |
| 가. 경쟁산업 | |
| 나. 독점산업 | |

I. 머 리 말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지역간 갈등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지역간 갈등이 얼마만큼 첨예화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발표된 김용학교수의 논문(1989)은 이러한 지역간 갈등이 특정지역출신자에 대한 편견과 같은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엘리트 층원에 있어서의 지역차별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1) 이 논문은 1943년의 각 지역인구 구성비와 제 3 공화국에서 제 5 공화국까지의 각 분야 엘리트의 출신지역 구성비를 비교하고 있다. 사법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호남지역은 1943년 인구구성비보다 적은 비율의 엘리트를 배출하였다.

이 논문은 또 호남지역출신자에 대한 배차적 감정이 다른 지역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을 보고하고 있다.²⁾

여기서 우리는 지역차별이란 기호(taste) 와 이 기호가 초래하는 결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를 이용하면 호남사람에 대한 배차적 감정이 있다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는 기호가 있다는 것이고 이 기호는 엘리트층원에 있어서 호남사람의 상대적 소외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지역차별이라는 주관적 기호가 경제적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 자원분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차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에 있다.³⁾

주관적 지역차별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나 독점적이나에 따라, 차별당하는 집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생산단위당 비용이 생산량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역간 임금격차의 백분비로 표현되는 시장에서의 지역차별의 정도는 다르며 따라서 차별당하는 집단의 상대적 고용량도 다르게 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바는 주관적 지역차별의 정도가 같다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독점적일수록 시장에 나타나는 객관적 지역차별의 정도가 심하고 따라서 지역차별의 자원분배에 대한 왜곡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
- 2) 1988년 한국사회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응답자들 중에서 23%의 사람들이 호남지역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를 꺼린다고 응답한 반면에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을 친구로 사귀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전국적으로 보아 겨우 4% 정도였다.
 - 3)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집단간 차별의 정도가 그룹간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social and physical distance)의 차이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심리학자들은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집단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지역차별을 하나의 주어진 주관적 기호로 간주하고 이러한 차별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 가설을 베커(Becker, 1971)의 이론을 이용해 도출하고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동원하여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지역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시장과 자본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산업정책을 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본고의 또다른 목적은 지역차별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회과학분야에서 등한시하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적 분석이 단순히 경제현상 뿐만이 아니고 사회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지역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定義를 내리고, 3절에서 지역차별로 인한 집단별 생산요소별 수입의 변화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시장에 나타나는 지역차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5절에서는 4절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적 증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본고의 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다.

II. 지역차별의 定義

지역차별을 단순히 감정상의 문제가 아닌 경제현상으로 분석하려면 이에 대한 경제학적 定義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지역차별이란 하나의 기호(taste)로 위급된다. 따라서 지역차별을 하는 사람은 지역차별이란 기호의 충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지역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입이 적어진다. 이 기호는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댓가로 지불되거나 줄어드는 수입도 이 기호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한다.

어떤 사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때 근로자의 임금(money wage rate)이 π 라고 하자. 이 사용주는 지역차별이란 기호를 가지고 있어 특정지역 출신의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기피한다고 하자. 즉,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의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π 라 하더라도 이 사용주는 특정지역 출신의 근로자의 순임금(net wage rate)을 $\pi(1 + d_i)$ 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d_i 를 이 사용주의 특정지역출신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계수(discrimi

nation coefficient : DC)라고 한다.

이번에는 어떤 근로자가 지역차별이란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근로자의 임금(money wage rate)이 π 라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출신의 근로자와 같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근로자는 순임금(net wage rate)을 $\pi(1-d_j)$ 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d_j 를 이 근로자와 특정지역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계수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비자가 지역차별이란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어떤 제품의 가격(money price)이 p 라고 할지라도 이 소비자는 특정지역출신의 근로자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의 순가격(net price)을 $p(1+d_k)$ 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d_k 를 이 소비자의 특정지역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계수라고 한다.

지역차별이란 특정지역출신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비효용(disutility)이 발생하여 화폐임금 또는 화폐가격 이외에 비화폐적인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서 지역편애(nepotism)란 특정지역 출신자와의 접촉에 의해서 효용(utility)이 발생하여 화폐임금 또는 화폐가격에서 비화폐적인 편익(returns)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지역차별은 위의 d_i, d_j, d_k 가 0 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며 지역편애는 0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의 지역차별의 정도가 클수록 차별계수 (d_i, d_j, d_k) 가 크게 된다. 사람마다 지역차별의 정도가 다르므로 차별계수는 한 확률분포를 이룬다.

지역편애는 지역차별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근로자 및 소비자의 지역차별은 사용자 지역차별과 유사하게 분석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역차별보다 그 정도가 적게 인식되므로 본고에서는 사용자의 지역차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한다.

III. 지역차별의 效果

특정지역(H) 과 나머지지역(R) 출신의 두 근로자집단을 생각하자. 이 두 집단의 근로자의 인적자본은 동일하며 생산에 있어서 완전대체재(perfect substitutes)라고 하자. 지역차별은 이 두 집단 사이의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를 야기시킨다. 이 임금격차를 두 집단 사이의 시장차별계수

(market discrimination coefficient ; MDC)라고 정의한다. 즉 π_H 와 π_R 을 각각 H 집단과 R 집단의 시장균형임금이라고 하면, MDC는 $(\pi_R - \pi_H)/\pi_H$ 이다.⁴⁾

이 MDC의 크기는 물론 개인의 DC의 크기에 의존한다. 그러나 개인 DC의 평균뿐만이 아니고, 이 DC가 집단 안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 두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떤지, 생산함수가 어떤지 등도 이 MDC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차별로 인해 지역별·생산요소별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보자.

H와 R이라는 두 지역이 있다고 하자. 두 지역은 각각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있고 H의 자본 및 노동은 각각 R의 자본 및 노동과 완전대체재라고 하자. 또한 두 지역 사이에 생산물은 거래되지 않고 단지 생산요소만 거래된다고 가정하자. 각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H 지역은 노동을 R 지역에 수출하고 R 지역은 자본을 H 지역에 수출한다고 하자. 지역차별이 없다면 균형에서 다음이 성립한다: (a) 각 생산요소의 가격은 어느 지역에 고용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다. (b) 생산물의 가격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든 동일하다. (c) 각 생산요소의 가격은 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나 R 지역 구성원이 H 지역이 소유한 노동과 자본에 대해 지역차별을 한다면 R 지역구성원은 H 지역구성원과 같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게 된다. R 자본의 H 지역에 대한 수출량이 줄고 R 지역에서 수출되어 H 노동과 결합되는 R 자본의 순수입(net return)이 감소한다.

4) 만약 H와 R 집단이 생산에 있어서 불완전대체재(imperfect substitutes)라면 시장차별계수는 $(\pi_R/\pi_H) - (\pi_{R^0}/\pi_{H^0})$ 이다. 여기서 π_{H^0} 와 π_{R^0} 는 지역차별이 없을 때의 각각 H 집단과 R 집단의 시장균형임금이다.

또한 지역차별로 H 노동의 R 지역에 대한 수출량이 줄고 R 자본과 결합되는 H 노동의 수입을 감소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에서는 R 지역으로부터의 자본수출도, H 지역으로부터의 노동수출도 줄게 되어 두 지역 모두의 총 순소득(aggregate net income)이 감소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생산요소별 순소득은 모두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R 지역의 자본의 순수입과 H 지역의 노동의 수입은 감소하나 R 지역의 노동과 H 지역의 자본의 수입은 증가한다.

이 결론은 상식적인 기대와는 매우 다르다. 사람들은 지역차별로 H 노동의 임금이 R 노동의 임금보다 낮게 되면 그 차이가 R 자본의 이익이 되어 경쟁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차별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R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R 자본의 생산요소시장에서의 독점(monopsony power)에 근거한 임금차별(wage discrimination)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지 지역차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차별은 R 자본의 순수입을 감소시킨다.

IV. 시장차별계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먼저 한 사람의 사용주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자. 그는 완전대체재인 H 출신과 R 출신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H 출신과 R 출신근로자를 함께 고용하는 균형에서는 $\pi_H(1+d) = \pi_R$ 이 성립한다 (여기서 π_H , π_R 은 각각 H 출신, R 출신근로자의 화폐임금이고 d 는 사용주의 DC 이다). 왜냐하면 $\pi_H(1+d) > \pi_R$ 이면 R 출신근로자만을 고용하고, $\pi_H(1+d) < \pi_R$ 이면 H 출신근로자만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MDC 는 사용주의 DC 인 d 이다. 그러나 사용주가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면 MDC 는 DC 의 사용주집단 평균 이외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경쟁산업과 독점산업에서의 MDC 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대조함으로써 시장구조가 지역차별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다.

가. 경쟁산업

근로자의 공급은 H 출신근로자의 수가 R 출신근로자수의 1/3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만약 각 기업이 동일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균형에서 MDC ($MDC = (\pi_R - \pi_H) / \pi_H$ 로서 H 출신과 R 출신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의 백분비로 정의됨.)는 일사분위 DC(first-quartile DC: 각 기업의 DC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전체의 1/4의 위치에 있는 DC)가 된다. 왜냐하면 MDC가 일사분위가 되어야 산업 전체의 1/4이 H 출신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수급이 일치한다. 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R 출신근로자의 공급이 증가할수록 균형 MDC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R 출신근로자와 H 출신근로자의 수가 같다면 균형 MDC는 중위값 DC(median DC)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기업이 동일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각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의 수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먼저 생산단위당 비용(unit cost)이 생산량이 증가해도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자. DC가 작은 기업일수록 생산단위당 순비용(unit net cost)이 작게 되어 가장 작은 DC를 가진 기업이 산업전체의 생산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MDC는 이 기업의 DC가 되고 이것은 H 출신근로자의 상대적공급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단위당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가장 작은 DC를 가진 기업이 모든 생산을 독점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각 기업이 동일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MDC는 일사분위 DC이다. 그러나 H 출신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즉, $\pi_H(1+d) < \pi_H(1+\bar{d})$ (여기서 d는 회사의 DC이고 \bar{d} 는 일사분위 DC임.)인 기업은 H 출신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해서 R 출신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H 출신근로자의 임금은 R 출신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올라가 균형 MDC는 일사분위 DC보다 작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DC의 평균뿐만이 아니고 DC의 분포형태도 MDC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H 출신근로자의 상대적 공급량도 MDC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다. H 출신근로자의 상대적 공급량이 늘어나면 과거에 R 출신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회사가 H 출신근로자를 고용해야 함으로 H 출신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H 출신근로자의 상대적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MDC는 커지게 된다.

나. 독점 산업

지금까지는 진입장벽이 없고(free entry) 생산물시장이 경쟁적인 산업을 생각했으나 여기서는 한 기업에만 독점권(franchise)이 주어져서 이 기업이 산업전체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독점산업을 생각하자. 이 경우 MDC는 이 독점기업의 DC가 된다. 만약 이 독점권이 팔릴 수 있는 권리(transferable franchise)라면 이 독점기업은 자기보다 낮은 DC를 가진 기업에 이 권리를 파는 것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 권리를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기업은 가장 낮은 DC를 가진 기업이므로 이 기업에게 이 권리를 팔게 된다. 따라서 MDC는 가장 낮은 DC가 되고 이것은 경쟁산업의 MDC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권이 팔릴 수 없는 권리(nontransferable franchise)라면 독점산업의 MDC는 경쟁산업의 MDC보다 크게 된다. 왜냐하면 독점산업의 MDC는 독점기업의 DC이므로 이것이 꼭 가장 낮은 DC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지역출신의 사용주에게 독점권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 독점산업의 MDC는 경쟁산업의 MDC보다 매우 높게 된다. 각 산업의 독점기업이 무작위로(random) 추출되었다면 독점산업들의 MDC의 평균은 사용주들 전체의 DC의 평균과 같게 된다. 경쟁산업들이(팔릴 수 없는 독점권을 가진) 독점산업들보다 MDC가 낮기 때문에(즉, 지역차별을 덜하기 때문에) 경쟁산업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H 지역출신 근로자가 고용되게 된다. 바로 이 가설이 본고의 가장 중요한 가설이다.

V. 통계적 증거

이 절에서는 경쟁산업에 독점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H 지역출신 근로자가 고용된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증거를 제시한다. 여기서 H 지역은 호남지역이다. 이용되는 자료는 1983년에 경제기획원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공동으로 실시한 「인구이동특별조사」이다.

원자료에서 가구주 남자피용자만을 추출하면 1,574명이 된다. 이 자료에는 각자가 속한 산업이 중분류되어 있다. 이 산업들을 독점적 산업과 경쟁

적 산업으로 분류한다. 먼저 1986년 총사업체조사보고서(경제기획원)을 이용하여 각 산업에서 3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의 종업원수가 각 산업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한다. 이 비중이 전산업의 그것보다 큰 산업들과 공공행정 및 국방(중분류산업번호 91)을 독점적산업으로, 나머지 산업들을 경쟁적산업으로 분류한다.⁵⁾

그리고 각자가 속한 직종을 9가지로 대분류하여 직종별·산업별(독점적산업 대 경쟁적산업)로 호남출신근로자 및 영남출신근로자가 전체근로자(직종별·산업별 전체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표 1>은 바로 이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의 최상단최우측의 숫자 0.1875는 전문직종종사자로서 독점적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18.75%가 호남지역출신이라는 것이고 그 바로 옆의 숫자 0.2135는 전문직종종사자로서 경쟁적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21.35%가 호남지역출신이라는 것이다. 그 바로 옆의 숫자 0.8752는 0.1875를 0.2135로 나눈 비율이다. 나머지 숫자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된다.

본고의 가설이 맞다면 각 직종마다 독점적산업보다 경쟁적산업에서 호남출신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야한다. 즉, <표 1>의 열 (3)이 1보다 작아야한다. 전직종의 경우 열 (3)의 비율이 1보다 작고, 직종별로는 9개직종 중 7개 직종에서 열 (3)의 비율이 1보다 작다.⁶⁾ 이와 대조적으로 영남출신근로자의 경우는 9개 직종 중 7개 직종에서 열 (3)의 비율이 1보다 크다. 따라서 지역차별에 의해서 호남출신근로자는 손해를 보고 영남출신근로자는 지역편애에 의해서 이익을 본다고 말할 수 있다.

5) <부표 5>을 참조할 것.

6) <표 1>의 열 (3)의 비율이 1보다 작을 확률이 0.5이고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라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 하에서 9개 직종 중 7개 직종이 1보다 작을 확률은 0.07031이다. 따라서 이 가설은 유의수준 0.1에서 기각된다.

지역차별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호·영남간 또는 지역별 경제·사회변수의 값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역별 제조업분포라든지 지역별 1인당 주민소득 등을 비교함으로써 호남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통제해야 될 변수들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업, 동일한 사람이 단지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지 여부를 따져야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는 지역별 입지조건, 상이, 주민의 인적자본의 상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에 본고의 통계적 분석은 독점적 산업의 호남지역출신과 경쟁적 산업의 호남지역출신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당한 정도 피할 수 있다.

<표 1> 호·영남출신근로자의 상대적 비중(I)

직 종 (표본수)	호 남			영 남		
	독점적산업 (1)	경쟁적산업 (2)	열(1)·열(2) 로나눈비율	독점적산업 (1)	경쟁적산업 (2)	열(1)·열(2) 로나눈비율
전문직(137)	0.1875	0.2135	0.8752	0.2917	0.4270	0.6831
행정직(57)	0.0833	0.2424	0.3436	0.3333	0.2424	1.3750
사무직(334)	0.0990	0.1970	0.5025	0.3614	0.3409	1.0601
판매직(86)	0.2759	0.2456	1.1234	0.3103	0.1930	1.6078
서어비스직(112)	0.1316	0.2262	0.5818	0.4211	0.3810	1.1052
농림어업직(32)	0.1538	0.2105	0.7306	0.4615	0.3158	1.4614
생산직1(130)	0.2696	0.1333	2.0225	0.3652	0.2667	1.3693
생산직2(214)	0.2282	0.2308	0.9887	0.3691	0.3846	0.9597
생산직3(462)	0.2571	0.2822	0.9111	0.3714	0.3484	1.0660
전직종(1,574)	0.1967	0.2407	0.8172	0.3632	0.3444	1.0546

주: 공공행정 및 국방이 독점적 산업으로 분류됨.

자료: 인구이동특별조사(1983).

〈표 2〉는 공공행정 및 국방을 경쟁적산업으로 분류한 경우의 결과이다. 호남출신근로자의 경우는 9개 직종 중 6개 직종에서 열 (3)의 비율이 1보다 작고 영남출신근로자의 경우는 9개 직종 중 6개 직종에서 열 (3)의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리고 전직종에 대한 열 (3)의 비율이 공공행정 및 국방을 독점적 산업으로 분류한 경우 (〈표 1〉)가 경쟁적 산업으로 분류한 경우 (〈표 2〉)보다 호남출신근로자의 경우는 작고 영남출신근로자의 경우는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및 국방에 있어서 호남출신에 대한 지역차별과 영남출신에 대한 지역편애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⁷⁾ 공공행정 및 국방이야말로 정부라는 한 기업에 의한 완벽한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 호·영남출신근로자의 상대적비중(II)

직 종 (표본수)	호 남			영 남		
	독점적산업 (1)	경쟁적산업 (2)	열(1)·열(2) 로나눈비율	독점적산업 (1)	경쟁적산업 (2)	열(1)·열(2) 로나눈비율
전분직(137)	0.2045	0.2043	1.0010	0.2955	0.4194	0.7046
행정직(57)	0.0526	0.2368	0.2221	0.3684	0.2368	1.5557
사무직(334)	0.0952	0.1711	0.5564	0.3265	0.3743	0.8723
판매직(86)	0.2759	0.2456	1.1234	0.3103	0.1930	1.6078
서서비스직(122)	0.1250	0.2018	0.6194	0.2500	0.4035	0.6196
농림어업직(32)	0.1538	0.2105	0.7306	0.4615	0.3158	1.4614
생산직1(130)	0.2996	0.1333	2.2476	0.3652	0.2667	1.3693
생산직2(214)	0.2245	0.2388	0.9401	0.3741	0.3731	1.0027
생산직3(462)	0.2258	0.2828	0.9045	0.3779	0.3448	1.0960
전직종(1,574)	0.2061	0.2284	0.9024	0.3559	0.3523	1.0102

주: 공공행정 및 국방이 경쟁적 산업으로 분류됨.
자료: 인구이동특별조사(1983).

7) 이 결과는 김용학교수(1989)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지역차별에 의해서 독점적 산업일수록 호남출신근로자를 적게 고용한다는 가설에 대한 또다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각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 중에서 호남출신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인구이동특별조사의 가구주 남자피용자 자료를 이용)과 사업체당 종업원수 및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표 3> 은 이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은 중분류되어 있고 비제조업은 대분류되어 있으며 기타산업은 산업분류번호 92, 93, 94, 95, 96 을 합친 것이다.

<표 3> 각 산업의 호·영남출신근로자의 비중

산 업	산 업 분류번호	호 남	영 남	사업체당종 업원수(명)	1인당부가가 치(십만원)
광 업	2	0.2459	0.1967	34.9	8,241
음식료품	31	0.3235	0.2941	7.1	6,227
섬유의복	32	0.2381	0.3810	14.1	3,505
목 재	33	0.3171	0.3171	6.7	2,462
제 지	34	0.2250	0.2500	12.0	6,542
화합물	35	0.0909	0.3977	34.5	14,240
비금속	36	0.2759	0.3448	18.1	7,807
1차금속	37	0.1250	0.3125	49.1	16,390
조립금속	38	0.1889	0.4222	25.6	6,574
기타제조	39	0.0800	0.6824	8.8	3,407
전 기	4	0.0833	0.6250	37.8	56,723
건 설	5	0.2708	0.2875	25.6	8,871
도·소매	6	0.1905	0.3333	2.4	4,484
운수창고	7	0.2727	0.2727	20.4	11,209
금융보험	8	0.2353	0.4118	7.6	14,348
기 타		0.2420	0.3699	4.0	3,707

주 : 사업체당 종업원수와 1인당 부가가치는 1986년 자료임.
 자료 : 인구이동특별조사(1983),
 국민계정(1989),
 총사업체조사보고서(1986).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통제한 후 호남출신근로자 비율과 사업체당 종업원수 사이의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는 -0.281 이고, 사업체당 종업원수를 통제한 후 호남출신근로자비율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사이의 부분상관계수는 -0.327 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사업체당 종업원수가 많은 산업일수록,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큰 산업일수록, 호남출신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의 득과점도가 사업체당 종업원수 및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⁸⁾ 독점적 산업일수록 호남출신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덜 고용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동일한 분석을 영남출신근로자에게 하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통제한 후 영남출신근로자의 비율과 사업체당종업원수 사이의 부분상관계수는 -0.344 이고 사업체당 종업원수를 통제한 후 영남출신근로자의 비율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사이의 부분상관계수는 0.547 이다. 첫번째 부분상관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지므로 본고의 가설과 어긋나지만 두번째 부분상관계수가 매우 크고 호·영남출신근로자에 대한 분석의 4개의 회귀분석계수 중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⁹⁾

위의 두 통계적 분석은 본고의 가설 - 경쟁산업에 독점산업에 비해 상대

8) 이규억박사(1977)는 이윤율과 집중율(득과점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9) 호남출신근로자의 비율(h)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체당 종업원수 (N)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V)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는

$$h = 0.267702 - 0.001649N - 0.0000021V, \quad R^2 = 0.3092$$

(8.630) (-1.055) (-1.249)

이다. 영남출신근로자의 비율(y)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y = 0.362535 - 0.003310N + 0.0000064V, \quad R^2 = 0.2997$$

(7.278) (-1.319) (2.359)

이다. 여기서 ()안의 숫자는 t 값이다.

적으로 더 많은 호남출신근로자가 고용된다. -을 지지한다. 따라서 독점산업에서 경쟁산업에 비해서 더 많은 지역차별이 일어나고 이 지역차별로 호남출신근로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통계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먼저 표본수가 1,574명으로 매우 적다. 둘째, 독점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셋째, 사업을 좀더 세분함으로써 독점과 경쟁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두번째 통계적 분석의 표본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료는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원자료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통계적 분석은 본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VI.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지역차별을 정의하고 지역차별의 경제적 효과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했다. 동일한 정도의 지역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나 독점적이냐에 따라 지역차별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정도는 다르다.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 높은 지역차별을 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차별의 자원분배에 대한 왜곡효과는 최소화된다. 반면에 산업이 한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으면 그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지역차별을 할 수 있다. 이윤이 0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지역차별을 해도 그 기업은 독점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독점적일수록 차별당하는 지역출신근로자와 타지역출신근로자 사이의 백분비임금격차(MDC)는 커지며 차별당하는 지역출신근로자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지역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자명해진다.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 비록 기업의 사용주가 강한 지역차별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업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그 사용주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지역차별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가 된다. 시장구조가 독점일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경쟁을 제고시켜야 한다. 경쟁적 자본시장을 통해 독점권이 지역차별을 가장 적게 하는 사용주에게 팔릴 수 있도록 되어 지역차별의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효과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위의 통계적 분석에서 공공행정 및 국방에서의 지역차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이야말로 정부라는 거대기업에 의한 독점산업이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독점권에 근거한 독점도 아니다. 따라서 지역차별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업무중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민영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개인의 선호(preferences)나 기업의 목적함수를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많다. 부동산투기근절 및 부유층의 사치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각각 부동산투기 및 사치소비가 사회악임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한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쉽게 돈버는 길이 열려 있으나 선량한 국민은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도록 권유한다. 사치소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부유층에게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과연 이런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개인과 기업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각각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지 말고 이윤을 극대화하지 말라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오히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 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각종 정책을 폈을 때의 반응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지역차별의 문제에 대한 정책도 지역차별을 하지말라는 식의 대국민홍보활동에 머무른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지역차별이란 주관적 선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산업정책을 펴서 지역차별에 대한 비용을 올림으로써 지역차별의 자원배분에 대한 왜곡효과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가지는 지역차별이란 기호도 차츰 감소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지방자치가 지방분리(segregation)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3절의 분석에서 H 와 R 지역 사이의 생산요

소 수출량이 감소할수록 두 지역의 총순수입이 감소하여 H 와 R 지역 사이에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사회의 총순소득은 최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에 의해서 지방분리가 이루어져 각 지방마다 자기자본, 자기근로자만을 고용하고 타지방자본, 타지방근로자를 배척한다면 위의 논리에 의해서 국가 전체의 총순소득은 감소한다. 지방자치에 의해서 생산요소, 특히 근로자의 지방간 이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국민계정」, 1989

—————, 「총사업체조사보고서」, 1986.

김용학, 「엘리트층원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 미시적 동기와 거시적 결과」, 1989.

이규억, 「시장구조와 독과점 규제」, 한국개발연구원, 1977.

Becker, Gary S.,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부표 1> 각 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명, %)

산 업	산업분류 번호	총종업원 (1)	대기업종원 (2)	대기업종업원 비율(1)/(2)
전산업		8,856,648	2,042,090	23.1
농업	11	11,619	2,651	22.8
어업	12	324	-	-
석탄	13	7,751	2,867	37.0
원유	21	58,459	35,266	60.3
금속광업	22	-	-	-
기타광업	23	6,200	3,472	56.0
음식료품	29	28,118	4,356	15.5
섬유의복	31	292,896	89,914	30.7
목재	32	1,014,420	334,211	32.9
제조	33	108,158	20,734	19.2
화학물	34	164,560	33,537	20.4
비금속	35	327,950	133,195	40.6
1차금속	36	131,479	33,351	25.4
조립금속	37	92,347	51,181	55.4
기타제조업	38	998,434	459,821	46.1
전기	39	159,791	27,622	17.3
수도	41	35,046	13,258	36.8
종합건설	42	692	-	-
전문직별건설	51	458,582	380,902	83.1
도매	52	140,048	22,321	15.9
소매	61	421,486	18,204	4.3
음식숙박	62	1,221,289	15,789	1.3
운수창고	63	809,984	16,980	2.1
통신	71	410,062	90,763	22.1
금융	72	46,188	11,165	24.2
보험	81	218,079	50,047	22.9
부동산	82	149,201	39,843	26.7
사업서비스	83	120,839	2,775	2.3
위생	84	126,762	15,005	11.8
사회서비스	92	25,410	5,017	19.7
문화서비스	93	822,688	113,037	13.7
개인서비스	94	120,495	12,525	10.4
	95	326,291	2,281	0.7

주 : 대기업은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자료 : 총사업체조사보고서(1986).